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83
----------	------

발의연월일 : 2020. 9. 15.

발 의 자 : 윤준병 · 김민철 · 오기형
어기구 · 이해식 · 허종식
최종윤 · 인재근 · 장경태
김주영 · 강선우 · 위성곤
송옥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

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에”를 “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이나”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이나”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을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따른다.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빈집정비에</u>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u>시행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② ~ ⑧ (생략)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 ----- ----- -- <u>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u> ----- ----- ----- <u>시행하여야</u> <u>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u>빈집이나</u>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u>실시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 ----- <u>빈집정비계획의 수립·</u> <u>시행을 위하여 빈집이나</u> ----- ----- ----- ----- <u>실</u> <u>시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 ----- -----

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 ② ~ ⑥ (생략)

<신 설>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
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 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 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